

성과급적연봉제 - 경쟁구도로 대학을 통제하라!

교수 봉급제도를 개선하려는 본래 취지가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교수연구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립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면 (적어도 납세자인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홍보한다), 작금의 소위 '성과급적연봉제'는 그 본래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제도다. 누군가 국립대학과 교수를 노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터무니없는 제도를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과급적연봉제로 교수들 사이의 경쟁을 극단적으로 부추기는 것은 경쟁이 사람을 길들이고 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지금 우리사회에서 널리 씌먹는 전략을 이제 교수사회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과도한 경쟁은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고 대상자들에게는 고통을 강요하는 방법이지만 또한 효과가 입증된 교활한 통제 수단이다. 사설기관이나 미디어의 대학평가를 이용해 대학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기자 대학들이 이제 미리 알아서 잘 통제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은 지금 우리가 뚜렷이 목격하고 있다. 평가점수에 유리하다면 비교육적인 수단마저 거리낌 없이 동원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이다.

국립대학은 고등교육의 사회적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세금으로 위탁 받은 돈을 제 돈인 양 휘두르는 정부 관료들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수의 납세자들에게 고등교육의 사회적 공공성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는 것도 모자라 강제적 상대평가에 성과누진제마저 추가한 성과급적연봉제는 경쟁의 가혹하고 야비한 형태로, 노골적인 시장경쟁 체제를 교육기관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겉으로 광고하는 본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첫째, 공공성과 시장경쟁은 본질적으로 상충한다.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시장원리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고와 주어진 진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토론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며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 다양성을 존중하며 도덕적이고 비판적 사유를 하는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 덕성과 인성을 깨우는 교육, 배운 자의 사회적 책임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고결한 교훈을 일깨우는 교육이 효율과 이윤을 중시하는 시장방식으로 가능하겠나? 아무리 돈이 최고인 시대가 되었다 해도 교육의 이상과 기업의 이상 사이에는 합칠 수 없고 합쳐서도 안 되는 차이가 있다.

대학교육은 공공재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오히려 빈부양극화의 주 통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건전한 사회통합과 다양한 인재공급을 위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대학에서 시장경쟁체제를 강화하면 필연적으로 공공성은 훼손된다. 이 점만으로도 성과급적연봉제라는 단기적 실적과 효율만을 위해 고강도 경쟁을 유발시키는 제도는 국립대학이 지닌 본연의 임무인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미래세대의 올바른 교육에 치명적인 위해를 입히게 된다. 이는 국립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이 기업처럼 시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본질적 가치와 사명을 양보하는 파우스트(영혼)의 거래를 연상시킨다. 대학에 대한 사회적 존경은 대학이 본질적인 가치를 지킬 때 유지된다. 불의에 맞서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며 교수들의 학자로서 소명의식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준다. 대학의 상업화는 대학의 사회적 위상을 추락시키고 자유를 박탈한다. 시장원리의 관철은 대학의 본질적 가치를 죽인다.

둘째, 경쟁을 위해서는 평가의 잣대를 도입해야 한다. 여기에서 피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와 마주친다. 단지 평가의 기술적 용이성 때문에 연구업적의 계량적인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질적인 면은 평가 자체도 어렵고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구한다.) 그 부작용으로 대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교육이 소홀히 될 것이며 또한 단지 평가만을 위해 논문을 양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수준은 필연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는 대학사회에서 이미 일어난 상황이다.

셋째, 성과급적연봉제는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킨다. 요즘 현실에서는 본말이 전도되었지만, 대학의 임무는 연구보다는 교육에 있다. 교육의 질은 본질적으로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교육과 연구를 함께 평가하겠다고 하면 단지 평가의 용이성 때문에 교육 평가가 무력화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교육을 등한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창의적 교육의 시도를 장려하는 비상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에 대한 거의 유일한 평가 잣대는 학생들의 강의평가이며, 부수적으로 강의계획서 충실도 따위가 있을 수 있지만 연구실적의 양적 평가에 견주어 평가의 변별력과 차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교육평가는 결국 무력화되고 등한시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대학교수의 주요 임무는 교육이며 특히 교육의 질 확보인데, 이를 평가하겠다는 방법이 바로 교육을 훼손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학이 교육기관임에도 교수의 자발적 헌신 이외에는 교육에 힘써야 할 동기부여가 거의 없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교육의 질 재고를 위해 어떤 방안이 유효할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볼 문제이지만, 경쟁의 강화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넷째, 성과급적연봉제는 필연적으로 연구성과의 질적 하락을 부추긴다. 단지 계량적 수치가 평가에 용이하다는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평가는 논문의 편수나 다른 유사한 계량점수에 바탕을 두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대학교수의 학자로서의 위상에 치명적인 오점을 유도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학자사회에서 논문편수 강조는 조롱의 대상일 뿐이다. 논문 쓰느라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일견 모순되는 말에는 상당한 진실이 담겨있다. 학문함이 그저 논문 쓰기로 변질된 것은 엄청난 주객전도다. 진실한 탐구의 결과물로서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논문을 쓰는 상황으로 변질된다면 이것보다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어디에 있다. 학문이 목적이 아니라 보상을 위한 도구로 전락된 것은 이미 우리 대학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파행과 퇴행을 바로잡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필요함에도 성과급적연봉제는 도리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한편,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부추기려는 의도라면 구태여 성과급적연봉제라는 자극적인 제도를 따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 연구재단과 여러 경로를 통한 연구비만으로도 능력 있는 교수는 이미 연봉을 훨씬 상회하는 보상을 받고 있고, 금전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탁월한 학자는 세계적 명성을 얻지만 탁월한 교육자가 그만한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것만으로도 교수가 교육을 등한시할 동기부여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탁월한 학자가 교육의 부담과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교수직을 택하는 주된 이유는 대학이 그나마 외부에서 강요된 경쟁에서 자유롭고 여유롭게 자신의 학문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사회에서 단기적 성과경쟁을 더 가혹하게 부추기는 성과급적연봉제는, 측정이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측정하려 들다가, 결국 교육과 연구의 질적 하락을 유도하고 장려하게 된다.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교육과 연구의 질 동반하락을 유도하는 제도로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겠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다섯째, 성과급적연봉제는 교수사회에 굴욕을 강요하는 제도다. 외부적으로 강요된 봉급체계의 강제적 변경, 게다가 기존의 호봉제를 일거에 폐지하고 연봉제와 상대평가 기반의 성과누진제를 도입하는 것은 교육자이자 학자로서 명예를 중시하는 교수사회에 굴욕을 강요하는 것이다. 대학이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인다면 대학은 자신의 권리와 책무 모두를 저버리는 것이다. 권리란 비록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교육자로서 품위 있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말하며, 책무란,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학문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 대학교수이자 사회의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말한다.

성과급적연봉제의 관철은 경쟁이라는 명분으로 논문생산 숫자늘음을 통해 동료교수의 봉급약탈을 장려하는 것으로 대학마저 뒷다리 잡기, 사다리 걷어차기, 약육강식이 횡행하는 이른바 정글사회, 동물의 왕국으로 전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건 물론 경쟁으로 황폐화된 인간의 왕국에 대한 풍자일 뿐, 자연 속 동물들의 삶의 질서와는 다르다.) 결국 대학의 고유한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다.

아무리 지금이 돈과 기업의 시대라지만 기업의 방식을 어디에나 적용할 수는 없다. 기업에서는 경쟁과 효율, 성과와 성장, 이윤과 표준화, 관리와 경영을 중시하지만 대학의 가치는 다르다. 대학의 가치는 대학의 자율성과 자치, 학자의 소명, 학문의 자유와 다양성을 소중히 지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학문적 독창성과 창의성은 자발적 동기와 자유로움,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독자적으로 연구하며 자유롭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적 거리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필요하다. 학문함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경쟁과 평가는 독창성과 창의성을 말살한다. 경쟁은 자율을 침해한다.

여섯째, 경쟁은 사람을 통제하는 교활한 방법이며, 성과급적연봉제는 이를 실현시킬 극단적인 수법이다. 앞에 언급한 교육과 학문에 미치는 많은 부작용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들이 대학에 성과급적연봉제 도입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불행하게도 '경쟁구도로 대학을 통제하고 교수들을 길들이려는 의도' 이외에는 더 좋은 해석이 없다. 이것은 대학의 가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하지만, 대학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비극적인 판단이다.

대학은 사회에서 한발 떨어져서 대학이 속한 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 불평등을 폭로하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서 학자의 책무다. 완전히 노골화된 기업권력의 시대에, 우리 사회에 깊이 심화되고 고착화 되어가는 사회적 부조리와 경제적 불평등을 고려하면, 여기에 대한 비판과 폭로가 더욱 절실히 필요함에도, 대학평가라는 경쟁에 순응한 대학은 이미 자신이 앞장서 소위 신자유주의(자본의 자유를 부르짖는 말기자본주의) 프로그램의 침병으로 변모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강압이 아니라 단지 돈을 이용해 유발한 경쟁만으로도 이렇게 됐다. 신자유주의가 숭배하는 가치가 바로 '경쟁'이다.

사회의 건전한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비판의 수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비판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비판이 사라진 공간에서 기업의 이윤추구에 효율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삐 풀린 관료적 부조리, 정치적 부패, 사회적 불공정과 불평등의 심화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야당 없이 여당만 있는 독재국가와 같은데 비판을 봉쇄한 체제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는 20 세기에 나타났던 나치즘,

파시즘, 국가자본주의(소비에트)가 시민과 사회 그리고 그 체제 자체에 요구한 대가와 파국이 잘 보여준다. 비판을 혐오하는 지금의 말기자본주의(돈으로 맺어진 기업권력-관료-정치)의 결탁 또한 지금 이러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

사회비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대학에서 (경쟁구도를 통해 개인 업적에 몰두해야만 살아남는 통제구조를 만들어) 교수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결국 비판을 거부한 체제의 필연적인 부패와 퇴행으로 사회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과급적연봉제는 그 시행의도에서부터 저의가 의심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적 책무 모두를 황폐화시키는 퇴행적 제도다. 이를 전면 거부하는 것이 이 시대 대학교수로서 마땅히 취할 태도다. 성과급적연봉제는 외부에서 고등교육기관에 강요한 굴욕적인 제도이기도 하며 그 내용과 실행이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크게 퇴보시킬 것이다.

성과급적연봉제를 이용한 경쟁구도의 강화는 곧 대학자율권과 교육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진다.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진행된 법인화 획책, 총장직선제 폐지 기도, 성과급적연봉제 감행, 국립대 재정회계법 물밑작업 등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무력화와 교수 통제라는 일관된 방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학자율성 침해와 경쟁을 통한 교수 길들이기는 요즘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후퇴와도 궤를 같이하고 있는 시대적으로 매우 엄중한 문제다. 기업적 가치가 민주주의와 양립하기는 어렵다.

결국 대학의 자율권이 무력화된 이후 남은 결과는 기업적 가치를 대학에마져 마음껏 관철하는 것이다.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저버린 대학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사라지고 이틈에 권력(정부와 기업)의 간섭은 노골화된다. 교육과 학문은 시장논리에 종속되어 공공성은 사라지고,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며, 값비싼 교육비와 빈부의 고착화로 가난은 대물림되고, 대학교수들마저 정치와 기업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발언에 자기검열을 하는 상황이 된다. 지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사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와 대학에서 상당히 진행된 실상이다. 이렇게 비판과 정화 기능이 억제되어 관료적 부조리와 정치적 부패, 사회적 불평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국가의 결말은 너무도 뻔하다.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봐야겠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 전문에까지 명기한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대학의 자율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향방은 결국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교수 각자가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대학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투쟁의 대상은 과거의 독재보다 훨씬 더 교활해진 권력이다. 기업이 모든 권력을 석권해가는 흐름을 배경으로 시장논리를 강요하며 대학마저 기업으로 기업의 도구로 만들고 경쟁구도로 교수를 통제하려는 기업과 관료의 잘못된 결탁이 우리사회에서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는 퇴행이 그 대상이다. 이대로라면 정부 관료의 방조와 지도하에 그리고 내부적 자발성으로 대학이 기업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폭주하는 자본권력으로부터 대학을 지키는 투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투쟁이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삼엄한 현실 앞에서 대학교수는 시대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